

김정일 와병, 북한사회 어디로

2008. 9. 18 뉴코리아정책연구소 정책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9절 행사 불참으로 ‘포스트 김정일 진단’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자칫 호사가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의 선부른 분석은 뜬 구름 잡기식의 무력한 시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는 세 가지를 전제해야 한다. 첫째, 북한체제의 후계구도 논의는 아직 이르며, 둘째, 북한의 체제전환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 셋째, 북핵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은 상당기간 정중동의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다만 그 정중동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급격한 변화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 정부가 남북간 핫라인 구축, 남북경협의 정상화, 당국간 회담의 재개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도록 대응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전제와 대응방향을 기본 입장으로 밝히며, 뉴코리아정책연구소(가칭)은 그동안 언론의 주된 관심사였던 ‘김정일 중병설’을 둘러싼 3가지 쟁점, 첫째, 김정일 유고(有故) 시 북한 체제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후계구도는 누구로 결정될 것인가? 셋째, 북한체제 급변사태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북한관련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전망이 유의미한 시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종합적으로 소개, 정리하고자 한다.

1

북한 체제의 향후 진로는?

김정일 이후 북한에 대해, 통일연구소는 8월 30일 발표한 <김정일의 9.9절 불참과 향후 북한체제 전망>에서 “당과 군의 실세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측 전망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9월 13일자 보도가 전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집단적인 지도체제, 이른바 민주집중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는 어떤 형태로든 군부가 관여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있다. 《데일리 NK》의 손광주 편집국장은 북한은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해본 적이 없으며, 집단지

도체제는 김일성 · 김정일 유일지도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인식되었다. 북한 정치사에서 김일성 반대파에 대한 숙청으로 유명한 8월 종파사건도 소련계 간부들이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는 유일지도체제를 해체하려는 분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최소한 집단지도체제가 가능하려면 중국처럼 당 중앙위 정치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는데, 조선 노동당 정치국은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실제로 조선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6인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김정일 하나로, 나머지 5명은 사망했다. 그런 점에서 당 정치국은 사실상 김정일의 1인 기구에 불과하다.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예견하면서 국방위원회가 그 중심기관이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손광주는 반론을 제기한다. 국방위원회는 내각과 최고인민회의를 지도기관일 뿐, 노동당처럼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이 아니며 조명록, 김영춘 등 국방위원 대부분이 80세를 전후한 노년층으로 실질적인 활동력을 담보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이 역시 당 정치국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1인 기구인 것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도 북한에서 민주집중제는 헌법상의 형식적 규정일 뿐이며, 집단지도체제를 생각해보거나 시도해본 적이 없으며, 지난 수십 년간 유일지도체제를 주장했고 실행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중국의 경우, 모택동과 덩소평 등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도, 혁명 1세대들이 건재한 상태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에 포진해 상당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택동과 덩소평 사후, 큰 무리 없이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며, 새로운 후계자를 양성해낼 수 있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 현재의 북한에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실장은 9월 17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정일의 후계구도로서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당의 권력 장악 가능성, 김정남 또는 김정철로의 후계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논의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든 북한의 권력체제는 과거와 같은 1인 독재 수령체제가 아니라 권력분점, 혹은 누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체제가 외형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한다 해도 그것의 실질적 내용은 과도적 지배체제이며, 그 내부에 상당한 긴장과 대립을 내포할 것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가 수령과 당, 인민이 유기체적 삼위일체를 이루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대 · 내외적으로 선전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체제의 향후 진로에 경로의존성을 부과할 것이다. 즉, 머리 없는 신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북한 엘리트나 주민들에게 수령 없는 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일본인들이 천황 없는 일본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체제는 김정남, 김정철 또는 제3의 인물을 명목상의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그 내부에서 당과 군의 실세들이 권력을 분점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형식에 치중하여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예측하면 안 될 것이다. 새로운 후계자가 옹립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김정일 1인 독재체제의 재래(再來)도 아닐 것이며, 명목상의 지도자라 하여 완전한 허수아비도 아닐 것이다. 아마도 각 핵심 인물과 세력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며 얽히고 설키는 권력게임을 전개할 것이며, 이는 도

식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걸모습이 아닌 속살, 그것의 구체적 실체이다. 호사가적 취미로 선부른 예측을 남발하기보다는 신중하고도 차분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후계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지난 8월 《월간 뉴스한국》에 기고한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 유력한 차기 후계자>란 글에서 김정일의 차남 김정철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버지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소문은 신빙성이 희박하며 아직까지 김정일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김정철이라면서, 그의 이력과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정성장에 따르면 김정철은 현재 김정일의 정치적 성장과정과 동일한 코스를 밟아가고 있다. 조선 노동당에서 가장 막강한 부서는 조직지도부이며, 김정일은 1966년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이처럼 김정철도 1999년 또는 2000년경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중앙기관지도과 책임부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증언이 북한 내 유력한 소식통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 NK> 손광주 편집국장도 “조선 노동당의 핵심은 당 중앙위 비서국이며 그중의 핵심은 조직지도부이고 김정일이 총비서-조직비서-조직지도부장을 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철이 조직지도부에 상근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김정일이 생각하는 후계자는 김정철이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 진단한다.

김정철의 활동은 그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인 어머니 고영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철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를 졸업한 후인 2007년에 들어와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을 비롯한 각종 공식성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8년 3월부터 청진시에 머물면서 ‘비사그루빠검열’(비사회주의 그룹검열)을 비롯해, ‘중앙당 검열’, ‘보위부 검열’을 지도했으며, 4월 20일경부터는 ‘국방위원회 검열’을 지도하다가 지도력 부재로 철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성은 김정철이 비록 서투르기는 해도 검열에 나섰다면, 이는 그가 이미 당 내에서 요직을 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김정일의 건재를 전제한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김정일도 1964년에 조선 노동당 간부로서 활동을 시작한 후, 1974년에 이르러서야 후계자로서 공식 지명되었고, 그런 이후에도 모종의 권력투쟁을 거쳐 1980년을 전후해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었다. 만약 김일성이 1974년을 전후해서 사망했다면 오늘날 북한의 통치자는 김정일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를 감안할 때, 북한 내부에서 김정철의 입지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공고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고영희로부터 견제를 받아 퇴출된 장성택이 2006년 복권되었고, 그가 김정남을 지원한다는 점,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인 김옥의 위상 확대가 사망한 고영희의 흔적을 빠르게 지워가고 있다는 점이 김정철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듯 하며, 갈수록 악화되는 식량난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이 3대 세습을 용인할지도 미지수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남 김정남이 차기 후계자로서 유력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는 조선 노동당의 2인자로 판단되는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남은 중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중국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왔으며, 그래서 중국이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김정남의 권력승계를 선호할 것이라 관측이다. 하지만 중국이 김정남을 지원하는지 여부는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김정남이 중국에 오랜 기간 체류했다는 것이 중국이 김정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베이징이 아닌 중국으로선 변방이라 할 마카오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이러한 분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체제의 본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후계문제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황장엽은 김정남 후계설을 주장하면서 “정권 승계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중국은 공개적으로 간섭하지 못하겠지만, 보이지 않게 평양 내부를 조절하는 힘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드레아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홍콩의 아시아타임스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경에 북한의 체제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김정일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그의 후계자의 기반이 취약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개입해 친중정권을 세워 평정에 나설 것이며,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도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입장에서 김정남이나 김정철이냐는 2차적 문제일 수 있다. 설사 중국과 인연이 적은 김정철이 권력을 승계해도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빠른 시간 안에 김정철을 중국의 입맛에 맞게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는 과연 누가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함으로써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느냐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김정남, 김정철이 아닌 제3의 인물이라도 중국은 용인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개입은 김정남, 김정철 또는 제3의 인물과 이들 각각을 호위하는 친위 세력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릴 때, 승리의 기세를 잡은 세력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권력승계를 최대한 잡음 없이 빠르게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변국과 북한 내부에서 있을지 모르는 반발을 없애면서 중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의 전략이다. 즉, 외면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는 북한 내의 권력집단 간의 암투로 결정되는 듯 보이지만 권력게임의 캐스팅보트, 다시 말해 결정적 변수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 NK》의 손광주 편집국장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고대 그리스 4막 5장 연극에 비유하면 북한문제는 제3막이 끝나고 제4막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적절한 비유이다. 비단 북한체제의 급변은 김정일의 와병만으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 <좋은 벗들>이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북한사정을 전하는 《오늘의 북한소식》 최근호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이 군대로까지 번져 군인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참다못한 군인들이 민간의 집단농장에 침입, 옥수수 등을 훔쳐내고, 그 과정에서 유혈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일이 군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쓰러졌으며, 깨어난 후에는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했냐’며 아래 사람들을 다그쳤다고 한다. 그래서 급히 식량을 징발해 군부대로 수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를 내세운 북한의 군인들이 굶주린다는 것은 현재 북한의 식량난과 이로 인한 체제 이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평양 시내의 장마당에서 북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자 장사하러 나온 여인들이 단속원에게 대들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청진 등의 지방 주요도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거듭되는 식량난으로 북한 정부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며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염려가 되는 것은 김정일의 유고사태가 북한 체제의 급변을 불러오고, 여기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어떠한 발언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문제가 강대국들의 거래로 결정되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개입을 미국이 저지할 것이며, 그럴 수록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가진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김정일의 유고 가능성을 목전에 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핵의 통제이다. 김정일 유고의 혼란기에 북한 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의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제일 목표는 북한 핵의 통제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기댈 대상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중국이다.

북한 핵을 통제하고 체제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면 미국은 중국의 북한 개입을 얼마든지 용인할 것이다. 어차피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광대한 호밀밭의 작은 가시덤불일 뿐이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한다면 그것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함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러시아일 가능성이 크다. 즉, 한·미 공조가 아닌 미·중 공조 하에 북한문제가 처리되며, 여기에 러시아가 약간의 견제력을 행사하면 다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재하여 상황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공조만을 중시하며,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적지 않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을 고려할 때, 이는 단지 우려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일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성립된 줄도 모르고 미국에게 일본을 견제해줄 것을 부탁한 고종황제, 그의 19세기 대한제국의 가련한 역사가 21세기 이명박의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 정권의 조기 붕괴를 선불리 예측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 연착륙 정책을 실행하던 클린턴 정부와도 마찰을 빚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는 북·미 제네바 협약에서 어떤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킨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영향력과 발언권을 한반도 문제에서 행사했다. 우리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 활성화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줌과 동시에 한·미관계까지 밀접하게 결속시켰던 것이다.

심재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는 9월 17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에서 강경군부체제 등장이나 갑작스러운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경제문화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마추어적 타성과 낡은 이념적 관성에서 벗어나 진정 프로다운 자세로서 한반도 정세와 북한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